

[www.kef.or.kr](http://www.kef.or.kr)

2024

e경제 · 경영정책

리포트

Korea Enterprises Federation  
Weekly Newsletter

문의 : 경제분석팀(02-3270-7376)

## < contents >

- ▶ 통계청,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29)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4.1)
- ▶ 통계청,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4.2)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 (4.2)

### ◆ 통계청, 「2024년 2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3.29)

- **(생산)** 2024년 2월 전산업생산은 광공업(3.1%), 서비스업(0.7%)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대비 1.3% 증가\*(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 전산업생산은 '23.11월(0.3%) 이후 4개월 연속 증가
    - ▶ 전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Delta 0.7$ (23.10)→ 0.3(11)→ 0.4(12)→ 0.4(24.1)→ 1.3(2)
  - 광공업생산은 통신·방송·장비( $\Delta 10.2\%$ )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4.8%)\*, 기계·장비(10.3%)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3.1% 증가(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 반도체 생산 증감률 추이(% , 전월대비) :  $\Delta 10.5$ (23.10)→ 9.8(11)→ 3.6(12)→  $\Delta 8.2$ (24.1)→ 4.8(2)
  - 서비스업생산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 $\Delta 0.9\%$ ) 등에서 줄었으나, 숙박·음식점(5.0%), 운수·창고(1.6%)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7% 증가(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제조업평균가동률)** 2024년 2월 제조업평균가동률은 74.6%로 전월대비 2.5%p 상승(전년동월대비 5.7%p 상승)
  - ※ 제조업평균가동률 추이(%) : 72.6(23.10)→ 73.0(11)→ 72.0(12)→ 72.1(24.1)→ 74.6(2)
- **(제조업 재고율)\*** 2024년 2월 제조업 재고율은 110.1%로 전월대비 1.4%p 하락(전년동월대비 7.7%p 하락)
  - \* 제조업 재고율은 제조업 재고지수를 제조업 출하지수로 나눈 값으로, 출하된 물건보다 쌓인 물건이 더 많을 때 100%를 초과.
  - ※ 제조업 재고율 추이(%) : 115.0(23.10)→ 112.5(11)→ 104.1(12)→ 111.5(24.1)→ 110.1(2)

- **(소매판매)** 2024년 2월중 소매판매는 준내구재(2.4%)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비내구재(△4.8%), 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3.1% 감소\*(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24.2월 소매판매의 전월대비 감소 폭(△3.1%)은 '23.7월(△3.1%)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
- **(설비투자)** 2024년 2월중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0.3% 증가\*(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24.2월 설비투자의 전월대비 증가 폭(10.3%)은 2014년 11월(12.7%)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치
- **(건설투자)** 2024년 2월중 건설투자는 건축(△1.8%) 및 토목(△2.2%)에서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전월대비 1.9% 감소(전년동월대비 0.5% 증가)
- **(경기지수)**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9(전월대비 0.2p 상승),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4(전월대비 0.1p 상승) 기록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3월 수출입 동향」 발표 (4.1)

- **(총괄)** 2024년 3월 수출은 565.6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했으며, 수입은 522.8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12.3% 감소  
※ 수출은 지난 2023년 10월(4.9%)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 최근 수출 증감률 추이(% , 전년동월비) : 4.9('23.10)→ 7.3(11)→ 5.0(12)→ 18.2('24.1)→ 4.8(2)→ 3.1(3)  
- 3월 무역수지는 42.8억달러 흑자를 기록(10개월 연속 흑자)  
※ 무역수지 추이(억 달러) : 35.6('23.11)→ 44.5(12)→ 4.0('24.1)→ 42.9(2)→ 42.8(3)
- **(품목별)** 15대 주력품목(전체 수출의 약 75% 차지) 중 이차전지, 섬유 등 8개 품목 감소, 선박, 반도체 등 7개 품목 수출은 증가  
※ 2024년 3월 품목별 수출증감률(%)  
: (선박) 102.1, (반도체\*) 35.7, (컴퓨터) 24.5, (디스플레이) 16.2, (바이오헬스) 10.0, (무선통신) 5.5, (석유제품) 3.1, (가전) △1.7, (석유화학) △2.2, (자동차) △5.0, (차부품) △6.8, (철강) △7.8, (일반기계) △10.0, (섬유) △14.3, (이차전지) △23.0  
\* 3월 반도체 수출은 116.7억달러를 기록하여 2022년 6월(123.5억달러) 이후 21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 **(국가별)** 對CIS(△34.7%), 對중동(△15.5%), 對일본(△12.1%), 對EU(△6.7%) 등 수출은 감소했으나, 對중남미(14.4%), 對미국\*(11.6%), 對중국(0.4%) 등 수출은 증가  
\* 對미국 수출은 '23.8월(2.4%) 이후 8개월 연속 증가

#### ◆ 통계청,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4.2)

- 2024년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2023년 8월(3.4%)부터 12월(3.2%)까지 3%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는 2024년 1월(2.8%) 2%대로 하락했으나 2월(3.1%) 다시 3%대로 재진입 후 3월(3.1%)까지 3%대를 지속  
 ▶ 소비자물가 상승률 추이(% , 전년동월비) : 3.3('23.11)→ 3.2('12)→ 2.8('24.1)→ 3.1('2)→ 3.1('3)

- **(지출목적별)** 12개 부문 가운데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6.7%), 의류 및 신발(5.4%) 등 12개 부문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상승

※ 석유류 물가는 '23년 2월(△1.7%)부터 '24년 2월(△1.5%)까지 13개월 연속 하락했으나, '24년 3월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하여 14개월 만에 상승 전환.

- **(품목성질별)** 상품은 농축수산물(11.7%)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4.0% 상승했고, 서비스는 개인서비스(3.1%)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3% 상승

○ 2024년 3월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4% 상승했고,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3.8% 상승

## ◆ 산업통상자원부,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발표 (4.2)

○ 2024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8.5억달러로 전년동기(36.7억달러)대비 49.6% 감소 (도착 기준)

※ 최근 5년('20~'24)간 1분기 FDI 실적 추이(억달러, 도착 기준)  
 : 30.2('20.1q)→ 44.7('21.1q)→ 49.7('22.1q)→ 36.7('23.1q)→ 18.5('24.1q)

- 2024년 1분기 기준 제조업 FDI 규모는 4.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5.6% 감소했고, 서비스업은 12.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0.0% 감소

○ 국가별로는 EU\*, 일본, 미국 등에서 FDI가 감소, 중화권\*\* 등에서는 FDI가 증가(도착 기준)

\* EU는 영국을 제외한 27개국

\*\* 중국, 홍콩, 대만

- 2024년 1분기 일본에서 유입된 FDI는 3.2억달러(전년동기대비 △19.1%), 미국에서 유입된 FDI는 2.8억달러(△3.2%), EU에서 유입된 FDI는 2.7억달러(△76.6%)를 기록. 반면, 중화권에 서 유입된 FDI는 1.8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대비 60.3% 증가.

○ 유형별로는 그린필드형 FDI가 11.0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2.7% 감소했고, M&A형 FDI는 7.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44.1% 감소(도착 기준)

※ 최근 5년('20~'24)간 1분기 그린필드형 FDI 실적 추이(억달러, 도착 기준)  
 : 12.5('20.1q)→ 11.7('21.1q)→ 30.8('22.1q)→ 23.3('23.1q)→ 11.0('24.1q)  
 최근 5년('20~'24)간 1분기 M&A형 FDI 실적 추이(억달러, 도착 기준)  
 : 17.6('20.1q)→ 33.0('21.1q)→ 18.9('22.1q)→ 13.4('23.1q)→ 7.5('24.1q)

문의 : 노사협력팀(02-3270-7417)

## < contents >

- ▶ 양 노총은 지지 후보 지원 등 총선 대응 개시
- ▶ 민주노총은 차기 국회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연기
- ▶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체 진행
- ▶ 고용부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 ▶ 산업현장에서는 성과보상과 관련한 갈등 지속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 양 노총은 지지 후보 지원 등 총선 대응 개시

- 한국노총이 지난 3. 27 총선 지지 후보\*를 발표한데 이어 한국노총 산하 주요 산별 조직 및 지역본부 등은 지지 후보와의 정책 협약 체결, 지지 선언 등 진행
  - \* 한국노총 22대 총선 지지 후보(총 47명) :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41명, 국민의힘·국민의미래 4명, 녹색정의당 1명, 진보당 1명
- 한국노총은 총연맹 및 산하 조직에 「총선 승리 실천단」을 구성하고, 한국노총 지지 후보 선거 유세 지원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
- 한편, 민주노총 내부에서 진보당 지지 철회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현직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 일부는 4. 3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노동당 및 녹색정의당 지지 선언
  - \* 기자회견 주요 참가자 : 금속노조 위원장, 화섬식품노조 위원장, 민주노총 서울본부장 등
- 민주노총 전·현직 중앙집행위원들은 진보당과 민주노총 집행부가 눈 앞의 이익을 위해 진보 정치의 대의와 원칙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

## ◆ 민주노총은 차기 국회에서 산별교섭 법제화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

- 민주노총 산하 4개 산별노조(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는 4. 3 노동당, 녹색정의당과 함께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 관련 정책 협약식’ 개최
  - 정책 협약에는 ▲노조의 산별교섭 요구시 사용자 의무 참가, ▲단체협약 효력 확장제도 확대, ▲노조법 제2조·3조 재입법, ▲공공부문 노정교섭 구조 마련 등 포함
- 민주노총은 차기 국회에서 노조법 제2조·3조 개정과 함께 산별교섭 법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
  - 민주노총은 노조법 제2조 개정을 통해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별교섭 법제화까지 추진해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조직 확대 및 교섭력 강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
  - 실제로 민주노총은 올해 협력사, 특수형태종사자 분야에서 교섭 상대방 확대 투쟁과 초기업 교섭 확대를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선다는 계획 수립
- 이에 따라 총선 이후에는 민주노총의 산별교섭 법제화 관련 요구와 함께 주요 기업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기업 대상 교섭 요구 등으로 인한 노사관계 혼란 우려
- 한편, 산업현장에서 원청의 단체교섭 사용자성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HD현대중공업 사건 심리 진행을 예정하고 있어 대기업 협력사 노사관계를 둘러싸고 입법, 사법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불안 고조 우려

## ◆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연기

-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4. 4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출범 및 제1차 전체회의 개최 연기
  - ※ 경사노위는 지난 2. 6 사회적 대화 논의 의제와 관련해 3개의 위원회(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2개)를 구성·운영하기로 결정
  - 경사노위는 특별위원회 회의가 일정 조율 등의 이유로 연기됐다고 발표했으나, 일부 언론에서는 경사노위 산하 공무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공익위원 구성을 둘러싼 노정 갈등 가능성 주장

[참고] 경사노위 특별위원회 및 의제별위원회 관련

구분	논의 의제
<특별위원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 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의제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 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
<의제별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 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개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교체 진행

- 고용부가 지난 3. 29 최저임금위원회에 2025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은 5. 13 임기 만료 예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

- 이에 따라 경영계와 노동계는 고용부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후보자들을 추천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준비 활동 진행

\*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후보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하고, 사용자위원후보자는 고용부 장관이 지정한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하며 각 추천자에 대한 고용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

- 한편, 노동계는 한국은행의 돌봄서비스 업종 관련 보고서\*에 반발하며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추천 관련 입장 발표

\* 한국은행은 지난 3. 5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서 돌봄서비스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식 제안

- 노동계는 2025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하며 돌봄서비스 업종 노조 대표자 2명(한국노총 1명, 민주노총 1명)을 근로자위원으로 추천

◆ 고용부는 금융권을 대상으로 근로감독 실시

- 고용부는 4. 3 저축은행, 카드사 등 금융권 35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간제·단시간·파견 근로자 차별 등 기획 근로감독\* 결과 발표

\* 근로감독 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3월

- 고용부는 금번 근로감독을 통해 ▲복리후생 등 차별,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등 18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 적발

[ 참고 ] 고용부, 금융권 대상 근로감독 결과

유형	법 위반 사례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차별	① 건강검진, 사내대출, 학자금 등 미지원 ② 식대, 명절선물비 등 차등 지급
육아지원 제도 등 위반	① 임신근로자 시간외근로 ②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③ 여성근로자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로 실시

◆ 산업현장에서는 성과보상과 관련한 갈등 지속

-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3개 지회(대우조선지회,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 지회)는 4. 2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한화오션에 성과급 300% 지급 등 요구
  - 사측은 노조와 지난해 하반기 생산량 달성을 조건으로 성과급 지급에 합의했고, 생산량을 달성하지 못해 성과급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
- 한편, 삼성전자 노사의 임단협 교섭 난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노조는 4. 1 삼성전자 노사협의회에서의 임금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대표이사와의 면담 요구
  - \* 삼성전자는 지난 3. 29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5.1%로 결정
-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3. 18~4. 5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으며 ▲임금 인상, ▲성과급 제도 개편 등을 요구

## ◆ 임금교섭 타결현황

### 고용노동부 발표,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

- ※ 협약임금 인상률\*은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 7,165개를 대상으로 집계, 2023년도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는 6,869개(95.9%)
- \* 노사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정액급여, 고정상여금 기준) 인상률
- ※ 2023년 연간 협약임금 인상률 (임금총액 기준, 잠정치)
- (전체) 4.2%, 전년 4.7% 대비 0.5%p 하락
  - (규모별) 100~299인 4.6% (전년 5.0%), 300인 이상 4.6% (전년 4.7%)
  - \* 1,000인 이상 4.1% (전년 4.4%)

### < 개별기업 임금교섭 타결현황 >

(2024. 4. 3 현재)

번호	업 체 명	업종	일시	상급단체	내 용
13	우리카드	서비스	3.29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임금 총액 2% 인상 · 특별보로금(성과급) 115% 지급 · 사기진작금 100만원 지급 · 본인 결혼 축하금 인상(100만→150만원) · 남성 직원 육아휴직 기간 연장(1년→2년) 등
12	홈플러스	서비스	3.28	민주노총	▶ ('24년) 임단협 타결 · 선임~매니저 직급 임금 3.3% 인상 · 조리 근무자 저선량 폐CT 지원제도 도입 등
11	KB손해보험	서비스	3.5	민주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4급 이상 직원, 5·6급·직무급제 각각 기본급 5.0%, 6.0% 인상 · 성과급 월상여금의 450%(연봉의 18.5%) 지급 · 목표달성격려금 360만원(월상여금의 100%) 지급 · 복지포인트 180만 포인트(월상여금의 50%) 지급 등
10	하나은행	서비스	1.19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0% 인상 · 이익연동 특별성과급(기본급의 280%) 지급 등
9	우리은행	서비스	1.10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0% 인상 · 사기진작 명목 일시금 200만원 지급 · 개인연금 지원 금액 상향 조정(10만원→20만원) · 본인 결혼 축하금 150만원 지급 등
8	KB국민은행	서비스	1.5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임금 2.0% 인상 · 성과급 230% 지급 등
7	BC카드	서비스	12.12	민주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임금 1.72% 인상(자동상승분 포함 시 약 3.7%) · 연봉 80% 수준의 특별 사기 진작금 및 임단협 조기타결 축하금 지급 등

6	CJ제일제당	제조	11.23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1년 차 신입사원 임금 7.1% 인상. 2년 차 이상 직원은 고과 등급별 임금 인상률 소폭 인상 등
5	포스코	제조	11.13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0만원 인상 · 주식 400만원 지급 · 일시금 250만원 지급 ·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 ·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
4	고려아연	제조	11.2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8,000원 인상(승급분 제외) · 타결 일시금 290만원 지급 등
3	한국타이어	제조	10.31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4.0% 인상(정기 호봉승급분 포함) · 안전생산 장려금 200만원 지급 · 복지카드 60만원 지급 등
2	기아	제조	10.23	민주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 경영성과금 300%+800만원 지급 ·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지급 ·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급 ·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지급 ·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
1	KT	서비스	10.13	한국노총	▶ ('23년) 임단협 타결 · 직원 1인당 평균 연 235만 5,000원 인상(기본급 154만원, 평균 3% 수준) · 격려금 500만원 지급 ·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지급 ·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 단위를 '기존 주 40시간, 1주 단위 선택'에서 '월(4주) 160시간, 월 단위 선택'으로 변경 등

문의 : 노사관계법제팀(02-3270-7321), 의정협력팀(02-3270-7382)

## < contents >

### ○ 국회동향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관련

### ○ 판례동향

####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생략하고 교섭요구 노조로 확인한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부정)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

### ○ 국회동향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 관련

○ 공식 선거운동이 2주간 진행되며(3.28 ~ 4.10), 4월 5일 ~ 6일 양일간 사전투표 진행 예정

※ 선거일 6일 전인 4월 4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 ○ 판례동향

-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생략하고 교섭요구 노조로 확인한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 여부(부정) ; 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두49387 판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조법 규정은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하기 이전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취지이고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인바, 사업주가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조로 확인한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p>사실관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사는 여객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노조는 운수산업 종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조로 2021. 4. A사에 C지회(조합원 15명)를 설치하였음.</li> <li>- D노조는 A사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조(조합원 25명)로 2021. 5. 18. 노조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음.</li> <li>○ B노조는 2021. 5. 10.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A사는 그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인 2021. 5. 17.경까지 B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음.</li> <li>- B노조의 교섭요구 이후 설립된 D노조는 2021. 5. 18. A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 A사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게시하였음.</li> <li>- A사는 2021. 5. 26. 공고 기간을 2021. 5. 31.까지로 하여 교섭요구 노조를 B노조와 D노조로 확정한다는 공고를 하였음.</li> <li>○ B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이하 ‘이 사건 시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A사가 B노조의 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반드시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음.</li> <li>-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공고나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지연할 경우 과반수 노조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해야 한다며 인용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함.</li> <li>- A사는 노조법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은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B노조가 A사 사업장 내 유일 노조였던 2021. 5. 10.경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함.</li> <li>○ (원심) 사업주가 노조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조로 확인한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위법함.</li> </ul>
-------------	---

판결요지	<p>■ 관련 법리</p>
	<p>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두39361 판결 등 참조</p>
	<p>•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별도로 분리된 교섭단위에 의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는 것을 정당화할 만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의 사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오히려 근로조건의 통일적 형성을 통해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p> <hr/> <p>■ 판결 요지</p> <p>○ 하나의 사업장 내 하나의 노동조합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p> <p>-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만 사용자에게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p>① (유일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B노조가 2021. 5. 10. A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당시 A사의 사업장에는 B노조 지회만이 설립되어 있었으나,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A사에게 B노조의 2021. 5. 10.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공고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p> <p>②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규정의 취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은 공고의 방식이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등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음을 알려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향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또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사를 반영할 기회 등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통해 사업장 내의 다른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게 함은 물론, 아직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노동조합을 결성할 기회가 제공될 수 있음.</p> <p>③ (복수 노조 사업장인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현행 노동조합법령에 따르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산업별 노동조합 등 상급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어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을 당시 해당 사업장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음.</p> <p>④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의 필요성) 따라서 만일 교섭요구사실의 공고 제도가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본다면, 2개 이상의</p>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여부가 좌우될 수 있게 되는데,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도 있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적법성이나 노동조합 대표자의 권한 등을 다투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를 통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할 필요성도 있음.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한 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 이 사건 재심결정이 A사에 대하여 'B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시정명령을 한 것은 위법함.

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으로 해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임의로 위 절차를 변동하여서는 안 되고,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에 앞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가 선행되어야 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음.

②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한 취지)**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향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또는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사를 반영할 기회 등을 제공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명백히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알지 못하여 교섭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참여기회를 박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단체교섭권 등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려는 노동조합법의 제정 목적에도 어긋남.

③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이 사건 시정명령은 A사로 하여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및 제14조의5를 위반하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B노조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함을 공고하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교섭요구 사실 공고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에 관한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노동위원회의 재량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④ **(A사에게 지배·개입 의도가 있었는지)** B노조는 A사 대표이사 F가 2021. 5. 16.부터 2021. 5. 17. 사이에 근로자들을 만나거나 전화하여 D노조 가입신청서를 받는 등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F를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F에 대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A사를 상대로 제기된 부당감봉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 내지 기각되거나 취하로 종결되었으며, 근로기준법위반 및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고소된 사건에서도 혐의없음 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되었던 사실을

	<p>인정할 수 있으므로 A사가 B노조의 2021. 5. 10.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데에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 개입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음.</p>
시사점	<p>○ 금번 판결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3이 복수노동조합 사업장에만 적용된다는 취지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복수 노조 사업장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함.</p> <p>○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가 있는 경우에도 노조로부터 교섭을 요구받으면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의 절차를 거친 이후 교섭요구 확정 공고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는바, 노조법에서 규정한 교섭 절차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 금번 판결은 교섭창구 단일화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임의로 절차를 변경할 수 없는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절차를 생략하고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를 하라는 시정명령은 노동위원회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위법하고, 사업주가 교섭요구를 받은 후 곧바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을 지배·개입의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p> <div style="background-color: #e6f2ff;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b>노동조합법 시행령에 규정된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의 절차</b>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조의2) →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제14조의3) → 다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 및 방법(제14조의4) →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제14조의5) →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제14조의6) →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제14조의7)</li> </ul>